

G-Welfare Weekly Report

경기복지재단 | 발행인 (박춘배) |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3층 | Tel. 031-267-9399 | www.ggwf.or.kr | 2015.08.19.

01

중앙정부 정책동향

1.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1,496개 정비 추진

01 주요 내용

-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2기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과 지자체간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1,496개를 정비하기로 결정('15.8.11.)
 - 정부는 지난 5월 '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 세부 실천계획'을 발표('15.5.8.)한 바 있으며, 계획 상 4대 중점분야 중 하나가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는 것임

중점분야 1	중점분야 2	중점분야 3	중점분야 4
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	부적정 수급 근절	유사·중복 복지사업 정비	재정절감 인프라 강화

- 정비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과 조정방안은 다음과 같음

구분	조정방안
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 ↳ (예) 중앙 - 기초연금 / 지자체 - 장수수당	사업 조정 (통폐합)
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사업 ↳ (예) 중앙 - 교육급여 / 지자체 - 저소득층 교육지원 중앙 - 주거급여 / 지자체 - 사랑의 집짓기 사업, 주거마련 대출용자사업 등	
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↳ (예) 중앙 - 국민건강보험,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-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,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등	

02 쟁점 및 경기도의 대응

- 중앙정부의 협의·권고를 통해 즉시 조정에 들어간 지자체 사업이 있음
 - 성남시 :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(3일), 24일까지 주민의견 수렴, 10월 시의회 임시회 상정
 - 화성시 : 기초노령연금 지급 제외자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해왔으며 조례 개정 검토 중
- 지자체의 재량적 복지책임 범위(자치권) 침해 논란이 있음
 - 정부는 자치권을 감안하여 협의·권고를 통해 자율적 정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업(서비스 시간 확대)이나, 장애인 출산지원(대상 확대) 등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조정 시 분쟁의 소지가 있음
- 또한,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사업을 중복이라 판단하기는 어려움
 - 중앙의 노인돌봄사업의 보충적 성격인 지자체의 노인목욕서비스·위생수당 등은 대상, 급여 수준, 전달체계 등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,
 - 중앙정부 사업의 급여 적정성(충분성)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사업을 정비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
- 경기도는 기 구성된 '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단' 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는 등 해당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

2. 노인연령 기준 논의,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

01 주요 내용

- 지난 5월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현재의 65세에서 단계적으로 70세로 높이는 안건을 정기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, 최근 보건복지부는 '100세 시대, 노인 기준 어떻게 볼 것인가'라는 주제로 고령사회대책 토론회를 개최(2015.7.)
- 노인의 신체기능은 젊어지고,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도 변화
 - 지난 6월, 일본노년학회 총회에서는 고령자의 신체기능이 과거보다 5~10년 젊어졌음을 발표하며, 의학적 접근으로 고령자의 적절한 연령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
 -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(2014)에 따르면 '노인은 70세 이상' 이라고 답한 노인들의 비율이 2004년 55.8%에서 2014년 78.3%로 증가
- 보건복지부는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릴 경우 기초연금 1,900억원, 기타 복지서비스 4,000억원 등 연간 2조3,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
- 노인 연령에 따른 복지정책 현황

60세 기준	65세 기준
국민연금, 치매조기검진, 비용을 일부 내는 노인복지시설, 노인복지관·노인교실·노인휴양소	복지분야 : 기초연금, 노인장기요양보험, 노인돌봄서비스, 노인주거 또는 의료 복지시설 입소, 경로당 이용 등 교통분야 : 전철·지하철 면제, KTX·새마을호 주중 30%할인, 국내선 항공기 10% 할인, 여객선 20% 할인 국·공립박물관·미술관·공원·고궁 무료 입장

국민연금 수급 :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인상하여 2033년 65세 이상 지급

- 전문가들은 연령 상향에 앞서 노인 빈곤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하며, 사회적 안전망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일정 규모의 노인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
 -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.6%로 OECD 평균(12.6%)의 4배에 이르고, 노인의 자살률 역시 10만명 당 80.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
 -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지만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어 7년의 '소득 공백기'가 존재하는데, 노인 연령마저 70세로 올라가면 2015년 기준 212만1,186명이 기초연금 수급권을 잃게 됨

02 시사점

- 우리사회의 노인연령 기준 논의는 고용·복지시스템의 개편과 연동되어야 하며, 다양한 계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내실화 및 고령친화적 고용시스템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
- 노인 기준은 연령상향이라는 획일적 접근이 아니라 복지제도마다 차이를 두고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
 - 지하철 무임 승차 연령을 점차 70세로 올리되 소득에 따라 차등 요금을 내도록 하고,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은 신중하게 검토
-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연령 기준 상향 등 사회시스템 재설계는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가 중요
 - 경기복지재단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 조정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노인연령 검토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며,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의견수렴을 지속할 예정임

02

사도/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

지자체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표방하며 국제인증도시 가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, 국제인증도시의 종류와 특징을 연속기획으로 살펴봄. 이번 호는 건강도시에 이어 고령친화도시를 소개

1. 고령친화도시

-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자를 배려하고, 이동성이 편한 도시환경 조성. 아동·청소년·여성 및 노인 모두에게 살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 조성으로 고령에도 불편 없이 사는 도시를 뜻함
- ‘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(GNAFCC)’는 세계보건기구(WHO)가 2007년부터 추진한 프로젝트로, GNAFCC 회원은 해당 도시가 당면한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, 다른 도시의 우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국제적 정보 교류의 장에 참여 가능
- ‘WHO 고령친화도시국제네트워크’ 가입도시
 - 전 세계 28개 국 258개 도시가 회원이며, 국내 가입도시는 서울시(2013.6.), 정읍시(2014.12.)이고, 현재 경기도 수원시, 부산시와 제주도가 가입 준비 중임
- ‘WHO 고령친화도시국제네트워크’ 가입절차 :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→ 가입신청서 제출 및 가입 → 계획실행 → 평가 및 모니터링 → 멤버십 갱신
 - ※ 고령친화도시는 타 국제인증도시와 달리 회원제로 운영되며 가입절차와 자격이 까다로움
- 고령친화도시는 아래의 8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사업을 계획·운영하며, 전 세계적 고령화 추세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데 의의가 있음
- WHO 고령친화도시 8대 가이드라인 제시 모델

8대 분야	기본 방향
안전 및 고령친화시설	야외 환경과 공공건물 등을 포괄하며,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, 편리성, 접근성 향상으로 삶의 질 제고
교통편의환경	이용이 쉽고 저렴한 대중교통 편의환경 구축을 통해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
주거편의환경	고령친화적 주거시설의 구조, 디자인, 위치, 비용 및 공공서비스 설계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삶 구현
지역사회 활동참여	고령자의 가족사회문화종교여가활동을 위한 접근성, 행정정보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 증대
사회적 존중 및 포용	고령자 이미지 향상을 위해 초중등 교과내용 반영, 대중언론매체 활용, 지역 사회 내 고령자 욕구에 따른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세대간 통합 제고
고령자원활용 및 일자리지원	고령자의 욕구에 따른 인적자원개발, 자원봉사 및 취업기회의 제공확대를 통한 시민참여활동 독려 및 지역사회공헌 구현
의사소통 및 정보제공	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제공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활동 및 인간관계 활성화
지역복지 및 보건	고령자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충분성적절성접근성질적 강화를 통해 고령자의 건강 및 자립 증대

2. 경기도 노인사회활동 활성화 대회 개최

-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‘경기도 노인사회활동 활성화 대회’가 9.3.(목)~9.4.(금) 양일에 걸쳐 고양꽃전시관에서 진행됨
- 시니어골든벨, 공연 등의 시니어챌린지프로그램과 노인일자리 생산품 전시·판매, 문화 체험 부스 등이 운영될 예정

03 FACT CHECK

노인, 부유하면 자살하지 않는가?

-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2000년 인구10만 명 당 43.2명에서 2010년 80.3명으로 10년새 거의 두배 가량 증가해 OECD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음
- 핀란드는 자살사망자를 10년간 심리적 부검한 결과, 홀로 남겨진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앓게 되고, 자기존중감이 상실될 때 자살을 시도하게 됨을 발견
-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, 자살생각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(37.3%)이 가장 크고, 건강문제(27%), 배우자 등과의 갈등(16%) 순이었음
- 노인자살을 생각해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비율은 38.4%로 비수급자(14.5%)에 비해 2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대체로 연소득이 높을수록 자살 생각을 해 본 노인 비율이 줄어들지만 연소득 4,001만 원 이상인 가구의 노인들은 오히려 비율이 높아진 경향을 보이고 있음



자료 :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경 기도부분

가구 연소득	천만원 이하	천만원~2천만원	2천만원~3천만원	3천만원~4천만원	4천1만원 이상
자살생각(노인)	21.3%	14.4%	12.8%	11.9%	14.1%

- 노인자살은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잠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, 노인자살 예방대책이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함을 의미

04 통계로 보는 복지

평균수명과 건강수명



자료 : OECD, Health Data 2014. / WHO, World Health Statistics 2014. / 통계청, 생명표, 각 연도.

- OECD 회원국 중 평균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(83.2년)이며, 아이슬란드(83.0년)와 스위스(82.8년)가 뒤를 이음
-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13년 81.94년으로 1997년(74.39년) 대비 7.5년 증가하였으며, 남자는 78.51년, 여자는 85.06년으로 6.5년 가량 차이가 남
- 우리나라의 2012년 건강수명은 73년으로 2007년 71년에 비해 2년 증가하였으며, 건강수명은 일본(75년)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
- 평균수명 증가는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생활수준과 생활양식,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대와 의약품의 효율성 개선 등이 주요 요인임

*평균수명 :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로서 '0세의 기대여명'

*건강수명 : 현재의 사망률과 불-건강률 (ill-health)에 근거한 '온전히 건강한 상태로 살 수 있는 평균 연수'